가정의 달 5월, 가정이 더 두려운 사람들

20대 직장인 여성 A(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강압적인 통제와 폭언을 못 이겨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했지만,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는 직장에 전화하거나 집 주변을 찾아오는 등 사생활 침해를 이어갔고, A씨는 성인이 되고도 평생 반복돼 온 신체적 폭력이 계속해서 떠올라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A씨는 결국 최근 광주 지구촌가정성폭력상담소에 가정폭력 상담을 요청했다.

60대 여성 B(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40대 딸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정서적·신체적 위협을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딸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이제는 B씨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됐다. B씨는 최근 주변 지인의 소개로 가정폭력 상담을 받게 돼 딸로부터 분리 보호받을 것을 권고받았지만, 딸에 대한 정서적 의존과 사회적 낙인이 우려돼 분리 보호를 극구 거부하고 있다.

광주·전남 가정폭력 증가세…부모 외 자녀·배우자 등 다양한 폭력도
폭력 가정서 성장한 자녀 폭력 대물림에 장애인들 피해 사례도 반복
초기 개입으로 분리 보호하고 쉼터 신설 등 피해자 보호망 확대 필요

'가정의 달' 5월이지만, 가정에서조차 몸과 마음을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폭력 피해'가 지역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가정폭력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양상도 전통적인 부모의 폭력뿐 아니라 자녀, 배우자, 형제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 등이 쉼터 신설 등 피해자 보호망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 지역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총 2만8101건으로, 연평균 562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774건→2021년 5125건→2022년 5672건→2023년 6224건→2024년 630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도 총 3만6221건(연평균 7244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836건→2021년 7636건→2022년 7717건→2023년 7009건→2024년 7023건으로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되는 경우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에서는 해마다 1126명(2020년), 1094명(2021년), 953명(2022년), 971명(2023년), 747명(2024년) 등 총 4891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49명은 구속됐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각각 1730명(2020년), 1825명(2021년), 1813명(2022년), 1965명(2023년), 1611명(2024년) 등 총 8944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86명이 구속됐다.

지역 상담사들은 가정폭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초기 개입'을 통한 분리·보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초기 개입이 늦어질수록 분리·보호 조치도 어려워지며,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이 상담소를 찾을 때는 이미 장기간 무기력과 두려움을 겪은 상태라 상담보다도 감정의 수용과 공감을 먼저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폭력 가정에서 피해 받으며 자란 자녀가 성장 후 다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2차 가정폭력이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대물림' 사례도 반복되고 있어 빠른 개입이 절실하다는 것이 상담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에서 '가족쉼터', '학대아동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광주의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쉼터는 2022년 12월 기준 4곳, 전남 또한 4곳뿐이다.

보호시설 부족 현상은 특히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들 사이에서 심각하다.

쉼터 입소 시 '자녀 돌봄 가능 여부'나 '공동 가사 참여 가능성' 등을 사전에 따져 보기 때문에 장애 여성의 경우 쉼터 입소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많고, 자녀가 동일하게 발달장애를 가진 경우 연계가 더딘 '이중 사각지대'까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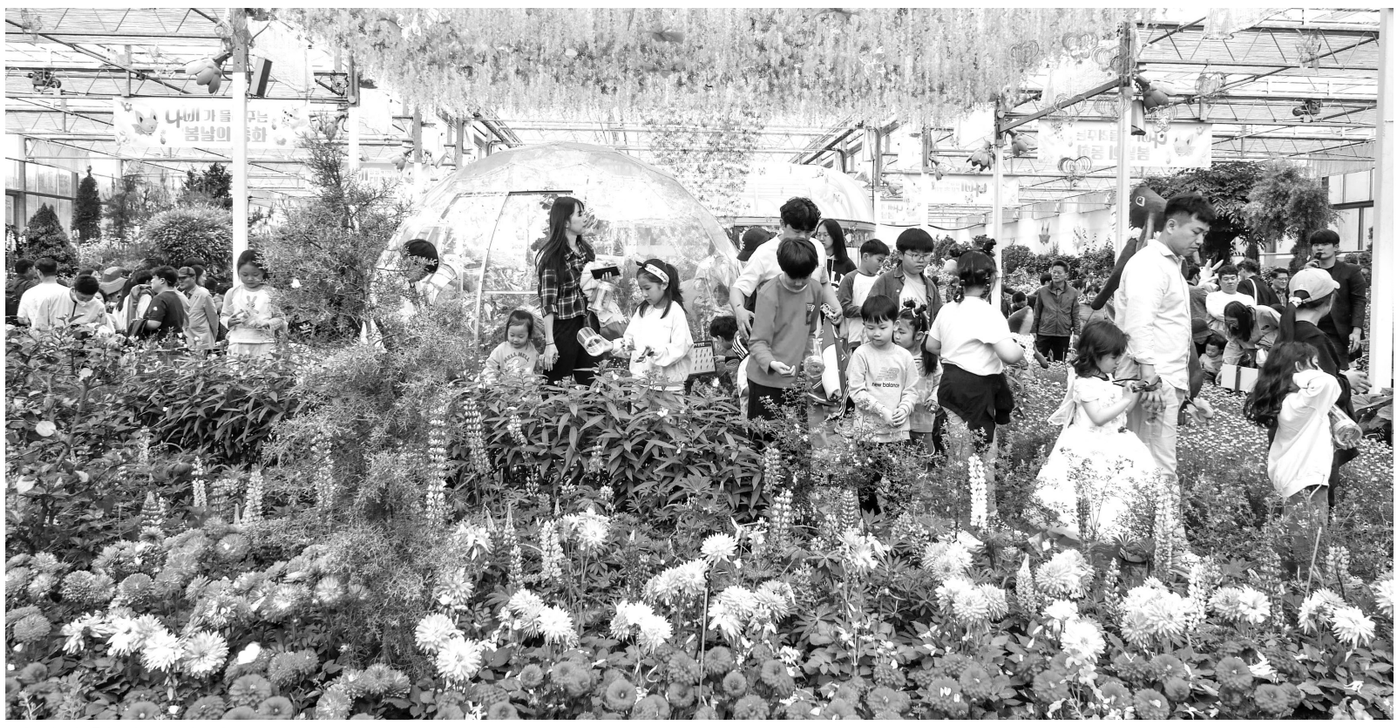
최근 상담소에 찾아온 지적장애 여성 C(광주시 북구)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C씨는 남편의 폭력에 수년 간 시달리다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쉼터로 달려갔지만, 모자는 '생이별'을 해야 했다. C씨는 남편과 분리되어 자녀와 함께 안전한 공간에 보호받기를 요청했지만, '쉼터 부족'을 이유로 거부당하면서 C씨는 장애여성쉼터에, 자녀들은 청소년쉼터에 각각 분리 입소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 장애 여성은 대다수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직접 진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늦어지는 데다가 쉼터 연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 장애인 가정상담소(실로암사람들)는 장애인 피해자 10명 중 6명 정도는 배우자가 아닌 부모, 형제 등 원가족에 의한 폭력에 노출돼 있어 피해가 장기화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광주 지역의 한 전문상담가는 "폭력은 가족이라는 폐쇄된 관계 안에서 발생해 외부 노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도 '가족 유지'라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오랜 시간 참는 경향이 강하다"며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보호와 회복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나비와 함께 동심 가득 어린이날인 5일 함평 엑스포공원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7회 함평 나비 대축제를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나비를 직접 날려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황금연휴 사건·사고 잇따라

완도 리조트 가스 누출 14명 치료
함평·장성선 연쇄추돌 24명 부상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에 광주·전남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6일 완도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께 완도군 완도읍에 위치한 리조트 4층 객실에서 일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됐다.

사고로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어린이 5명 등 투숙객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객실에서는 한때 실내 기준치(50ppm)를 8배 넘긴 400ppm 농도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경찰은 소방 등과 합동 감식한 결과, 보일러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연소 현상에 따라 일산화탄소가 발생했으며, 배관으로 유출되지 않은 일산화탄소가 복도를 통해 객실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완도군 등 안전 점검 담당 기관도 보일러 배관으로 가스가 역류하면서 마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보일러실 천장을 통해 복도, 객실로 일산화탄소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리조트는 지난 2016년 사용승인을 받은 뒤 9년째 운영하다 지난해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개·보수 공사를 거쳐 최근 재개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기 점검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리조트 측의 관리 소홀 여부를 확인중이다. 전남도는 사고와 관련, 전남지역 관광숙박시설 421곳, 일반숙박시설 2200여곳, 어린이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과 판매시설 등 1500곳에 대한 가스·전기·소방시설 등 분야별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함평과 장성에서도 연휴 기간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2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4일 오후 4시 50분께 함평군 학교면 광주방면 도로에서 승용차, 승합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혀 차량에 탑승객 13명 전원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오전 9시 1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장성분기점 인근에서는 고속버스와 승용차 등 4대가 연속으로 충돌, 고속버스 탑승자 6명 등 총 11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새벽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헌재 판단 받는다

채다은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어린이가 거의 통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살펴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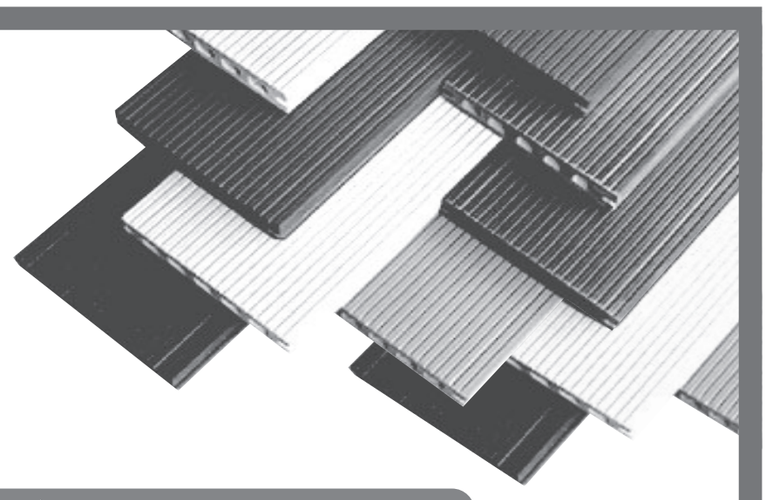
도로교통법 12조 1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 일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대부분 초등학교 인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돼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시속 30㎞ 제한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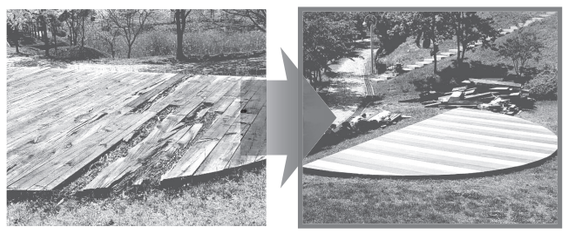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예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헌법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지난 1월 17일 오전 4시 41분께 시속 48㎞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는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담당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의 통행도 드문 심야·새벽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운행속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지 여부다.

채 변호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아무런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12조 1항이 헌재의 정식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2월 한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청구 기간을 넘겨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